

[서식 예]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(임대인사망, 상속인들을 상대로, 주택)

#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 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 
전화·휴대폰번호:  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  
2.◆①◇ (주민등록번호)  
3.◆②◇ (주민등록번호)  
위 피고들 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 
전화·휴대폰번호:  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1. 원고에게 피고 ◇◇◇는 금 30,000,000원, 피고 ◆①◇, 피고 ◆②◇는 각 금 2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 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 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1. 신분관계
  - 가.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◆◆◆로부터 소외 망 ◆◆◆소유였던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.
  - 나. 피고 ◇◇◇는 소외 망 ◆◆◆의 배우자이고, 피고 ◆①◇, 피고 ◆②◇는 각 소외 망 ◆◆◆의 아들이므로 소외 망 ◆◆◆를 상속한 상속인들입니다.

2. 원고는 소외 망 ◆◆◆로부터 20○○. ○. ○.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외 망 ◆◆◆ 소유의 건물을 임차보증금 70,000,000원, 임차기간 20○○. ○. ○. ○.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·거주하고 있었는데, 20○○. ○. ○○.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◆◆◆는 원인불명의 돌연사를 당함으로써 피고들은 소외 망 ◆◆◆의 배우자 및 아들로써 소외 망 ◆◆◆를 상속한 정당한 상속인입니다.
3. 원고는 임차기간만료 1개월 전인 20○○. ○○. ○○.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는데, 피고들은 임차기간이 만료된 지금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.
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◇◇◇로부터는 금 30,000,000원(70,000,000원×3/7), 피고 ◆①◇, 피고 ◆②◇로부터는 각 금 20,000,000원(70,000,000원×2/7)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-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갑 제1호증 |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   |
| 1. 갑 제2호증 | 임대차계약서         |
| 1. 갑 제3호증 | 영수증            |
| 1. 갑 제4호증 | 주민등록등본         |
| 1. 갑 제5호증 | 기본증명서(망 ◆◆◆)   |
| 1. 갑 제6호증 | 가족관계증명서(망 ◆◆◆) |

## 첨 부 서 류

- |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|-----|
| 1. 위 입증방법 | 각1통 |
| 1. 소장부분   | 3통  |
| 1. 송달료납부서 | 1통  |

20○○. ○. ○.

위 원고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		
비 용	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·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·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 된 경우,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,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(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7다8809 판결).		

#### 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